"의연하게 도정 업무에 집중하자"

김관영 도지사, 간부회의서 "도민·전북경제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집중해달라"

내년 국가예산 확보·현안법안 국회 통과 대응 총력·산단 혁신 대응 등 주문

김관영 도지사가 의연하게 도정 업무에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열린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오직 전북발전만을 생각하고 도민과 더 소통하며 나아가겠다"면서 "실국장은 흔들림없이 의연하게 오로지 도민과 전북경제를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최종 의결까지 한주를 남겨두고 있다"며,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전력 투구할 것을 재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전북에 지방분권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현안법안 통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다음주 월요일(11.28.)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행안위 소위 및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아 연내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가 지난 3일 산업단지 대개혁을 목표로, 산업단지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기업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책을 제공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산업단지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만큼, 정부 대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 기 추진중인 사업을 점검하고, 우리도 산업단지 전략 및 대책 수립, 공모 준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관영 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최근 송년회 등 연말연시 잦은 모임으로 인해 자칫 기강이 해이해질수 있다며 실국장을 중심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3대 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비리·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11월 말~12월초까지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법안 통과 대응을 위해 국회활동에 올인할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

도어스테핑 '계속 40%·중단 43%'

한국갤럽 여론조사… 尹지지율, 5주째 29~30%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30%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벌써 5주째 29%~30%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중이다. 잠정 중단된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는 '중단해야 한다'가 '계속해야 한다'보다 3% 포인트 높았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30%로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도 같은 기간 1%포인트 오르며 62%가 됐다. '어느 쪽도 아님'은 2%, '모름/응답거절'은 5%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이유 1위는 '외교(20%)'였다. 전주 대비 8%포인트가 오르면서다. 얼마 전 방한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동이 지지율로 이어진 모습이다. 2위는 '모름/응답거절(19%)'이다.

부정평가 이유 1위는 '모름/응답거절(12%)', 2위는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0%)', 3위는 '독단적/일방적(9%)' 순이다. 독단적/일방적이라는 답이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은 'MBC를 비롯한 언론 대응 등이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과 관련, 조사에 따르면 '계속해야 한다'는 40%, '중단해야 한다'는 43%다. 중단하라는 답변이 조금 더 많다.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실시한 조사에서 '계속해야 한다'가 47%, '중단해야 한다'가 32%였던 데에 비하면 여론이 상당히 움직였다. /뉴시스

김만기 도의원 "국유화 토지 중 미보상 토지 대상 보상 청구를"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부의장, 고창2)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를 당부했다.

도내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보상 청구 대상은 국가하천과 구 지방 1급이 해당되며, 도내 지방 1급 하천은 전주천, 삼천, 강경천, 어량천, 동진강, 남대천, 오수천 등 1,452필지, 60만7,000㎡, 보상비는 182억3,100만원이다.

1971년 전부개정된 하천법 제3조는 '하천은 국유로 한다'로 규정해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따라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였으나, 2007년 4월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의 국유제가 폐지됐다.

아울러 지난 2020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내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미보상 하천 토지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도내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보상 청구 대상은 국가하천과 구 지방 1급이 해당되며, 도내 지방 1급 하천은 전주천, 삼천, 강경천, 어량천, 동진강, 남대천, 오수천 등 1,452필지, 60만7,000㎡, 보상비는 182억3,100만원이다.

김만기 의원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동안 청구하지 않은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경수 기자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완주공장 준공식 지난 25일 전북완주테크노밸리2산단에서 (주)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이차전지 분리막 필름 완주공장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유희태 완주군수, 신상기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역농협 중소기업 간주 유효기간 연장

민주 안호영 의원 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24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진안 부귀농협 등 지역농협이 학교 급식에 국산 김치를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학교 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 예정되어 지역 농협이 김치 납품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도 지역농협이 학교 급식에 김치 납품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렸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김치 등의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국산 원료로 김치를 생산하는 농협이 학교 급식 김치 납품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농협은 90년대 초부터 학교 급식에 참여해 현재 수도권 초?중등학교 등 전국 약 4천여 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하고 있지만,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이 올해 만료될 경우 학교 급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안 부귀농협을 비롯해 국산 원료 100%를 사용하는 지역 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이 장려되고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도 마련될 것이다"고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김경수 기자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예산안 1325억 증액 의결

보훈병원 진료 예산 26억↑… 전문의 확충 재원으로

위탁병원 제도 개선 용역·시범사업 예산도 추가 반영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3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1,325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지난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사진)은 "보훈처 예산만큼은 여야의원들이 가장 긴 시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쳤다"며 "보훈정신 함양의 효과가 낮은 일회성,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고, 보훈 의료지원, 보훈단체 활동, 보훈 수당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위원장은 그간 정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예우 개선이 시급하며, 보훈 진료 체계 개선과 보훈 수당, 보훈단체 활동 예산 등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정무위가 의결한 내년도 보훈처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진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보훈병원 진료 예산이 26억원가량 늘었다. 이는 보훈병원 전문의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 고질적인 보훈병원 진료 및 검사 장기 대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위탁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도 추가로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위탁병원 제도 개선 시범사업은 김성주 위원장이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탁 진료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정무위에서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증액한 보훈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증액 의결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수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